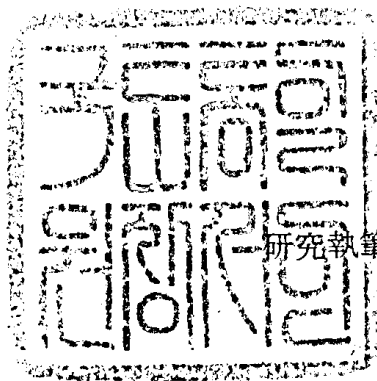


22
201911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共存·共榮時代의 共產主義 및 北韓觀 再定立方案研究

A View of Communism and North Korea
in the Era of Coexistence



研究執筆責任: 康 仁 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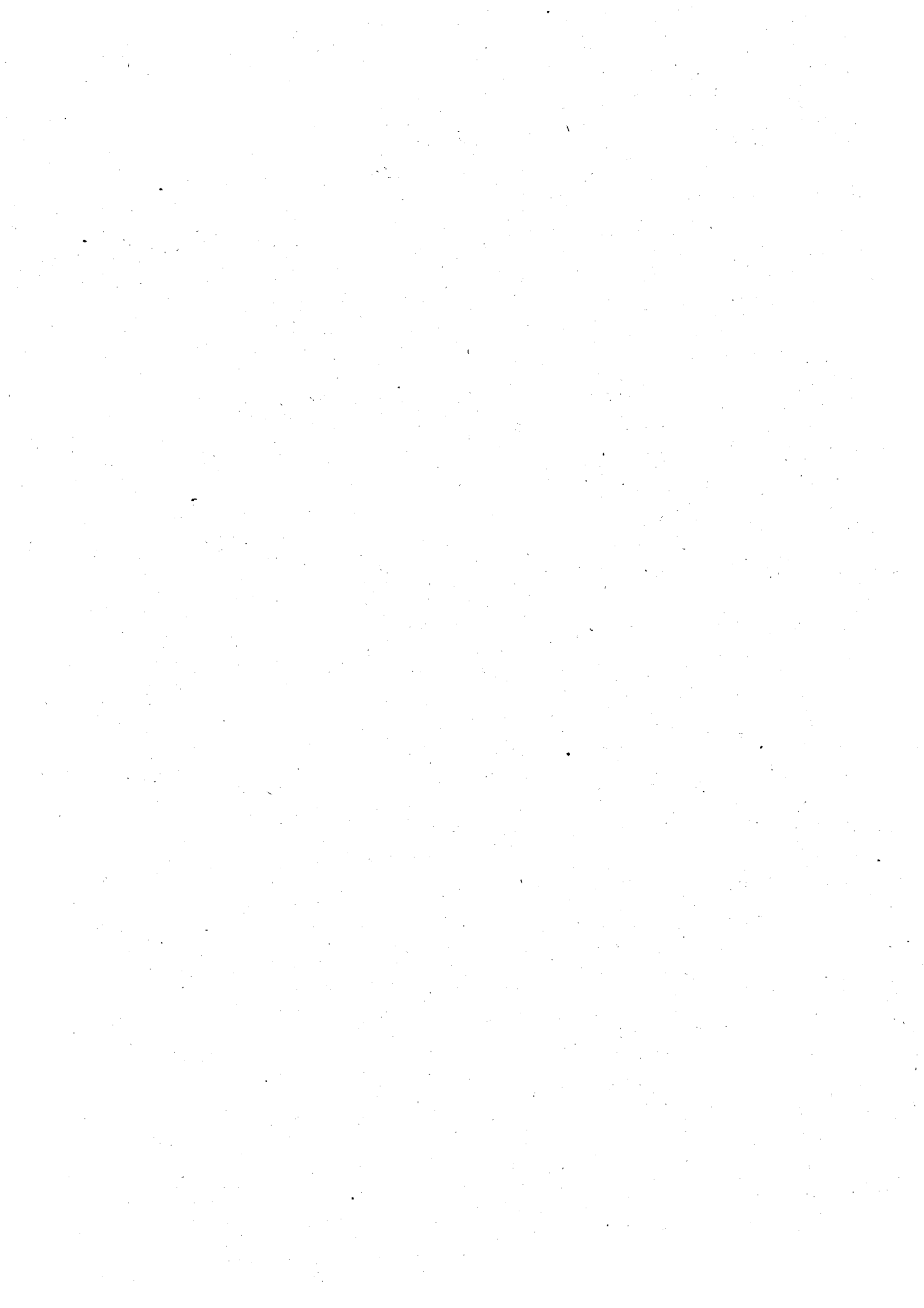
(略歷) 韓國外國語大學露語科卒
同大學院 國際關係研究學科卒
慶熙大 大學院政治學博士
南北調節委員會委員
北韓研究所所長
現 極東問題研究所 所長

刊行責任: 張 榮 敏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序 言.....	3
1. 南・北問題와 統一政策.....	8
가. 統一政策 展開와 平和定着 努力.....	8
나. 平和定着 提議의 法的 性格과 政策的 限界.....	17
2. 北傀 統一政策과 對南 戰略.....	23
가. 北傀 對南 戰略 基調.....	23
나. 北傀 統一政策과 “平和 提議”의 實體.....	27
3. 統一意識 現況과 對內外 狀況 認識.....	31
가. 統一意識 現況과 意味.....	31
나. 對內外 狀況 認識의 必要性.....	38
4. 前進的 統一觀 (=對北韓觀) 鼎立을 위한 試圖.....	43
가. 새로운 統一觀 (=對北韓觀)의 前提.....	43
나. 새로운 統一觀 鼎立을 위한 몇가지 方案.....	45
※ 英文要約.....	51



서 언

위험에 닥쳐 몸을 사리는 것은 본능이다. 정신이건 물질이건 변질된 것이 본원적(本原的)인 것으로 되돌아 가고자 함은 자연스러움이다. 전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갈라진 국토며, 나뉘진 혈연(血緣)을 다시 맺고자 회구하는 것은 우리 5천만 민족의 본능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우리에게 있어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성(統一性)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이루기져야 하는가? 통일의 상을 이루는데 있어 실제로 파악되어야 할 북한이란 또한 무엇이며 또 이렇게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음미(吟味)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분단조국의 통일이란 민족적 대명제(大命題)를 내걸고 남과 북에서 그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그 어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줄 기한을 명확하지는 않게나마 제시했던 시한인 1970년대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에 가서는 그 어떤 통일에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동포들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시한의 의미에 무관심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우리 정부가 “통일”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여 왔고, 앞으로 중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통일상(統一像)”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작업과정을 이 시점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과 조국 분단이 된지 30년이 넘고 6.25전쟁이 그치지 30년이 가까워 오도록, 전쟁 위협의 두려움에서 떨쳐 나지 못하고 국토 통일과 민족 대단합(民族大團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의 본능이 무더어서 그러한 것인가 혹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 그러한 것인가? 여하간 5천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싼 주변환경(周邊環境)에도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여 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통일에로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의 당위는, 남북 분단이 단순히 땅덩어리를 쪼개어 사람들의 살 곳을 갈라 놓았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민족 의식을 적대적으로 양분화(兩分化) 시키고 민족 사회의 공동경험(共同經驗)을 분열시켜 왔기 때문에, 동족상잔(同族相殘)이란 위협의 제거라는 본능적 측면과 혈연의 재결합이라는 의식적 측면에서 볼 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북한이란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북한이 우리와 역사와 지리가 같고, 종족적(種族的)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어가 같고 같은 생활권 안에서 경제생활을 영위(營為)하여 왔다는 기본적인 인식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으며 우리와의 평화적 결함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한 기초 위에서, 한국의 통일정책은 “우

리 민족 모두가 위험없이 잘 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이의(異議)없이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명제는 우리의 “통일관”의 요체(要諦)인 동시에 “북한관”의 배경(背景)이라 할 수 있겠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민족 모두가 위험없이 잘 살기 위한” 통일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밖으로는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요, 안으로는 위험이 닥치지 않게, 나아가서는 위험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힘을 기르자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었다.

최근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은 이러한 방향에서 한걸음 더 나가 “위험을 막으면서 자유롭게 살아보자, 잘 살기 위해 서로 돕자, 서로 도와 서로 잘 살게 하면서 위험을 없애고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간에 우선 각개 주민들의 “인간적 권리와 복지”를 확고히 향상시켜 놓고, 바로 이 “인간적 권리와 복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 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 정착 노력은 남·북간에 동태적(動態的), 정태적(靜態的)인 모든 관계를 복합적인 차원에서 풀어 보려는 시도라는 데에 크나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 지향 노력은 대북 전략적 측면에서 스스로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화 정착”논리는 자칫 “분단 고정화를 지향”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疑懼心)을 다분히 풍겨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 특히 통일혁명노선(統一革命路線)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북간의 통일정책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은 북한공산 집단의 통일노선이 보다 통일 지향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북한 공산집단이 내세우는 통일정책은 단순히 “통일”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데는 보다 더 전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혼란을 일으켜 주고 있는 것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통일정책은 대내외 정책 사항과 함께 대북 전략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전진적이고 공세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겠다.

이에는 우리의 통일정책, 대북한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아울러 북한 공산집단의 통일정책, 대남 혁명 전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앞서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통일정책, 다시 말하여 평화 정착 노력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국민의 선택적 권리(選擧的 權利)를 보장하기 위한 과도적(過渡的)이며, 잠정적(暫定的)인 “기한설정(期限設

定)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결코 통일의 목표는 물론 통일을 지체시키는 “편의의 장치(便宜裝置)”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공산집단이 내세우는 “연방제(聯邦制)란 것은 단순히 통일의 환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연방이란 간판아래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 하려는 그럴 듯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정확히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여기서는 남·북간 통일 노력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우리의 통일관, 대북관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또 이와 같은 통일관, 대북관을 세우고 전개시켜 나갈에 있어서 우리 내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보다 전진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통일관, 나아가서는 대북관을 정립시킴에 있어 신중히 모색해 보아야 할 몇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1. 남·북 문제와 통일정책

가. 통일정책 전개와 평화정착 노력

해방과 더불어 따라온 조국 분단의 비극을 극복키 위한 우리의 통일 노력은 몇가지 큰 갈래를 보여 왔다.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동족상잔의 6.25가 터졌으며, 이로 인한 동족간의 극한적 적대감정은 무력통일(武力統一)이라는 가장 강경한 통일방법으로 집약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후 자유당 정권시까지의 이와 같은 무력통일 정책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통일론(統一論)이었으며 무력에 의한 실지회복(失地恢復)과 동포 구출이라는 것이 그 명분을 정당화 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정책은 그 명분론으로 국민 감정을 일치화 시키기에는 모자람이 없었으나, 쌍방간 경쟁적인 군비확장에 급급케 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파탄은 주민들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지속은, 결국 남·북을 경제 후진국 대열로 밀어 넣으므로써, 결국 통일도 멀어지고 잘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민족 역사를 후퇴시키는 어리석음을 빚어 냈던 것이다.

또한 이 당시에는 북한 공산정권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북괴의 대남전략 진술에 대한 올바른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므로써 급기야 북한 공산집단의 술책에 말려들 수도 있는 위기가 항시 도사리고 있었다. 이 위기는 4.19혁명으로 현재화(現在化)

될 뻔 하다가 가까스로 극복되었다.

4.19 혁명 후 통일논의에 있어서 불행한 경험은 단지 4.19 그 자체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까지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무리하게 대내 정세에 결부시켜 이용하려 했던 당국자들에 대한 쌓인 불만이 견잡을 수 없이 터졌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5.16 혁명 후 우리의 통일정책은 비로소 새로운 자각을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정치 질서는, 대내외 정책을 떠나감에 있어서 세계질서 흐름속에서의 우리의 좌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북한 공산집단의 실체에 대한 현실적 영향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합리적인 통일정책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통일정책의 기조(基調)는, 우선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하고 대외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경제자립을 달성하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국력을 북한 공산집단보다 월등하게 배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흡수되게 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60년대에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에 이르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우선적인 목표를 조국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결정하였다.

평화정착 안의 제시는 무력 충돌을 배제한 선의의 경쟁(善意競爭)

즉 평화 공존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1970년 8월 15일 광복 25돐을 맞은 경축사에서 박정희대통령은 북한 공산집단에게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 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라고 무력없는 경쟁을 제의함으로써, 과거 25년간 긴장과 대립으로 얼어 붙었던 남·북관계의 평화적 조절을 위한 역사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앞으로 우리 통일정책 전개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증적 노력으로서, 1977년 8월 12일 최두선(崔斗善) 대한 적십자사 총재 는 북한 적십자사에 대하여 1,000만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를 의논 하기 위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였으며, 북한 적십자사측이 그해 8월 19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실로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간에 대화 가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어렵게 실현된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릴 필요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에 남·북간에 정치적 차원에서의 대화통로로 남·북 조절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그 후 남·북 적십자 회담은 판문점에서 2회의 예비 전체회의와 16 회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거쳐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제1차 본

회담을 개최한 이래,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모두 7차례의 본회담을 개최하였다.

한편 남·북 조절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공동위원장 회의를 갖고 1972년 11월 31일 제3차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남·북 조절위원회를 정식으로 설치키로 합의하므로써 서울에서 2회, 평양에서 1회의 본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기구 구성과 토의할 의제 등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문제에 대한 구체적 토의가 시작되자, 대화를 결렬시키려는 의도적인 술책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즉,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는 법률적 문제와 사회조건 및 환경개선론(環境改善論)을 고집하였고, 남·북 조절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과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고집하는 등 당초 저들의 속셈인 적화통일(赤化統一)의 여건조성에 광분하였다.

이로 인해 실로 4반세기만에 겨우 마련된 남·북 대화는 결국 다시 막힐 수 밖에 없었고, 이런 가운데 1973년 8월 28일 남·북 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이 남·북 조절위원회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일반적으로 선언하므로써 완전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중단된 남·북 대화를 다시 열기 위한 조치로서 1973년 11월 15일 남·북 조절위원회 구성 및 개편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간사 위원간의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또한 남·북 적십자 연락책임자 회의를 열 것을 제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남·북 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제의하여 우리 정부가 이에 응락하므로써 1973년 12월 4일부터 1975년 3월 14일까지 남·북 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가 10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한편 남·북 적십자 회담도 1973년 11월 22일부터 7회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1975년 5월 8일까지 10차례의 남·북 적십자 실무회의가 판문점에서 열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시기의 남·북 대화를 통해 정치 선전만을 일삼아 왔으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1975년 5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 11차 남·북 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와 1975년 6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 1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실무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회담을 무기한 연기시킬 것이 아니라 다음 회담 개최일자를 명백히 제의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북한 당국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써, 그나마 명맥만 유지하여 왔던 남·북 대화는 1975년 5월부터 완전히 끝막음 되었다.

그러나 7.4 공동성명은, 남·북간에 분단조국을 통일함에 있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원칙과 이를 위해 남·북 사이의 평화정착을 위한 선행조치(先行措置)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합의하였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7.4 공동성명에 의한 조국 통일 원칙은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적 대단합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조국의 통일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 여건이 극복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民族的 連繫)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므로써, 평화정착을 실행키 위한 구체적 원리를 분명히 제시하였던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에 의한 남·북 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인 1973년 6월 23일 역사적인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이 선언이 “남·북 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趨移)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이라고 밝혔다.

6.23 선언에서도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 원칙에 의한 남·북간 평화정착 논리를 분명히 재확인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6.23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함께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또, 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므로써 남·북간 정치적 공존원칙(政治的 共存原則)을 국제적 입장으로 확장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므로써 공산권과도 국제·경제교류를 주로 하여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교류를 과감히 능동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을 내놓으므로써,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공영 논리를 세계적인 것으로 넓혀 놓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6.23 선언은 정부수립 이후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주도하에 강력한 통일정책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아울러,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합리화, 보편화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가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제일의 요건일 무력충돌 배제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남·북 불가침 협정체결 제의”라 하겠다.

1974년 1월 18일 년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대통령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개항을 내용으로 한 남·북간의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첫째 : 남·북한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상호침략하지 않을 것을 만천하에 공약한다.

둘째 : 쌍방은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셋째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휴전협정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호 불가침 협정”의 제의는 1970년 8월 15일의 8.15 선언 및 1973년 6월 23일의 6.23 선언과 그 정책적 기초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단조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제의를 가장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남·북간 평화정착 논리를 새로이 정립하여 “평화 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29돐 기념사에서,

첫째 : “한반도에 평화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둘째 : “남·북한은 상호간에 문호를 개방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남·북한은 성실히 남·북 대화의 진전을 추구해야 하며, 쌍방간에 다방면에 걸친 교류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이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한반도 전역에 걸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며, 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여기서 밝혀진 평화통일 3대원칙은 불가침협정에 의한 공존논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조에 의한 공영논리를 극명(克明)하게 집약, 제시하여 긍정적인 평화통일 방안의 조건을 명백히 밝혀 통일로로의 지름길을 시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방안의 제시와 아울러 그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 왔다.

대한 적십자사는 1973년 7월 제7차 본회담에서 이산가족(離散家族)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의 이산가족과 친척들로 구성되는 성묘 방문단을 민족적 명절인 “추석”을 기해서 서로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1974년 7월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실무회의에서 우선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산가족 찾기 사업만이라도 먼저 착수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판문점에 이산가족들의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제의는 북한 당국의 “조건 환경”핑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해 추석명절을 기해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의 모국방문(母國訪問)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핑계가 얼마나 쓸데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을 대내외(對內外)에 실증시켜 주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바로 평화정착 논리에 입각한 인간의 선택적 권리와 자유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1977년 1월 북한에 대해 “모든 정치문제를 떠나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식량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1978년 6.23선언 6주년을 맞아 “남·북한 경제협력 제의”를 한 것은, 민족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바탕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는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노력의 표시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은, 각개 시민의 인간적 권리

와 민족적 복지(民族的 福祉)를 남·북 관계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방향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정치적 차원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차원으로 접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평화정책 제의의 법적 성격(法的 性格)과 정책적 한계(政策的 限界)

70년대 이후 한국 정부가 꾸준히 지속해 온 통일정책은 남·북간 평화정책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데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공산집단은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평화정책 노력이 한반도 분단 고정화를 위한 분열정책(分裂政策)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 정부가 이제까지 제의한 평화정책을 위한 통일정책의 법적 성격과 그 정책적 한계를 살펴 봄으로써, 북한 공산집단의 비난이 허구적인 것임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7.4 공동성명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였다.

7.4 공동성명은 남·북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성취할 것을 최초로 합의하고 남·북 관계를 정책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몇가지 복합적인 의미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몇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따져보면, 먼저 이 7.4 공동성명이 법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을 승인하는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당시 한국측 대표는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성명 발표가 결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어떤 법적 지위(法的地位)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이와 같은 태도는 법적으로 “유보(留保)”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성명으로서 한국이 북한 공산집단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공동성명이 엄격한 의미의 조약(條約)인가 또는 단순히 정치적 의도를 밝힌 성명서(聲明書)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인데, 7.4 공동성명이 쌍방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그 규정 내용이 극히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점으로 보아, 쌍방은 의도적으로 “조약체결”에 의한 승인효과 발생을 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국무총리는 7.4 성명이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그리고 7.4 공동성명중 무력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규정이 과연, 남·북간 전쟁의사를 포기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점은 어디까지나 휴전협정 서문상의 “평화적 해결 및 적대행위 정치”조항을 재확인 한 것이며, 한국 전쟁의 법적인 종결까지의 명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다.

특히 이 문제는 휴전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중공과 유엔(미국)의 참여 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가능한 것이다.

다음 6.23 선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6.23 선언의 내용중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관계에서 적용되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內政不干渉原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북한 공산집단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그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의미인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은 국가의 의지(意志)문제인 바, 이 성명이 단서(但書)로서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적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 선언이 결코 북한 공산집단을 승인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문제이다.

국제연합의 회원요건은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다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연합 자체에 의한 국가 승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엔 가맹국들이 당연히 새로운 가입국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닐뿐더러, 어떤 국가든지 신가입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견지에서 해석하여야 하겠다.

즉,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 공산집단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는다는 유보를 명시하는 한, 남·북 관계가 국가간에 관계로 전환하는 법적 효과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49년 이스라엘이 유엔에 가입할 때 아랍제국은 이스라엘 승인을

유보한 바 있는데,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 공산집단이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제의에 대해, 이는 조국을 두 개의 국가로 영구히 분열시키는 책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유엔가입은 대유엔관계에 있어서 외교능력을 갖는 하나의 국제 법상의 주체가 됨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할 용의가 있다고 이 선언이 밝힌 것도, 북한 공산집단을 어떤 실체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제거시킨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선언이 북한 공산집단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위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처럼 단지 “지역적 사실상의 정권 (Local de facto government)”으로서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4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밝힌 남·북한간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도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남·북간에 불가침협정이 체결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염려는 기술적으로 조약의 형식이나 내용 구성에서 상호 국가 승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조약체결이 곧 국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국제관계 즉

지분(支分)국가, 또는 지분국 상호간, 특정 국가와 특정 연방국가의 지분국간에도 조약의 체결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북한 공산집단을 결코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가 승인효과 발생은 배제되는 것이다.

당시 불가침협정 제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국무총리가 “우리는 휴전선이북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산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로서는 민족통일의 염원에 비추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한 뜻을 밝힘으로써,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 공산집단을 법적으로 승인하게 될 경우 “통일의 법적근거”는 일단 상실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제안은 통일의 선행단계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남·북 관계의 안정을 제도화하려는 제반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의들은 그 어떤 한계성을 내포하는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즉, 한국 정부의 “제의”는 단지 남·북간 “평화 정착”에만 급급하고 있고 오로지 분단현실의 고정화로 평화유지만을 추구하고 있어, 온

겨레의 영원인 통일을 내용적으로 방해하고 지체시키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염려하여 각종 제의에서 북한 공산집단을 “지역적 사실상의 정권”으로까지는 인정하면서도, 결코 법적 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하여 왔으나,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심리적 측면에서나 대내적으로 국민의 총화적 통일 의지를 부각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에서의 정책 제시가 강력히 요청되는 것이다.

2. 북괴 통일정책과 대남전략

가. 북괴의 대남전략 기초

북한 공산집단은 8.15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위 “외세(外勢)를 배제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남북충진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평화통일 제의와 선전을 계속하여 오고 있어, 마치 북한 공산집단이 진실로 남북 문제를 온 민족의 자유 의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이란, 통일문제를 국도와 민족의 단선한 결합이나 민족전체의 자유 의사에 의한 사회제도의 선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혁명을 통해서 적화통일을 성취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의 궁극적 목표가 남한적화(南韓赤化)에 의한 공산화 통일임은 그들의 최고 통치규율(最高統治規律)로 되어 있는 노동당 규약(規約)과 소위 북괴 헌법에서도 명백히 들어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1961년 9월 노동당 제1차 대회에서 채택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反帝反封建的)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1973년 19월에 채택된 소위 신헌법 제5조에서도 그들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하며 완전한 민

축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북한 공산집단의 궁극적 목표가 남한적화에 의한 공산화 통일일진대, 이의 실천을 최고 목표로 하는 그들의 대남전략은 남한의 공산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실천적 방도에 집중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북한 공산집단은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방도로서 소위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비평화적 방도라는 것은 바로 전쟁에 의한 통일방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 공산집단은 무력수단에 의한 통일을 단 한번도 부인한 일이 없다.

북한 공산집단은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 입장과 태도”라는 데서 공산주의자들은 부정의(不正義)의 전쟁은 반대하나 정의(正義)의 전쟁은 적극 지지한다. 정의의 전쟁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동지배층(反動支配層)들을 소탕하며 자본주의적 노예제도에서 피압박 인민들을 해방하고 식민지 인민들을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며 독립한 민족국가들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한다(김일성 혁명론, 213, 76.4.30, 통혁당 선전부 발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공산집단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그들의 공산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전쟁은 모두 정의의 전쟁이라는 이름아래 남한 적화를 위한 그들의 전쟁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무력에 의한 비평화적 통일방.

도라는 것은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자유로운 의사의 선택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참된 의미의 평화통일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산집단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방도란 한마디로, 먼저 혁명을 통해 남한의 공산화를 실현한 이후, 이로부터 수립될 남한의 공산정권과 북한 공산집단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공산집단은 “우리당의 평화통일 노선은 무원칙적인 평화를 주장하고 정의의 전쟁이거나 부정의의 전쟁이거나 전쟁 전반을 거부하는 ‘부르쵸아’ 평화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그것은 평화적 공존정책과도 아무런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 평화적 공존이란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인 것이며, 우리 당의 평화통일정책은 우리 민족 자체의 내부문제로서 평화공존과는 관계없는 조선혁명 수행에 관한 방도와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그들의 평화통일정책 개념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남한에 미군과 현집권층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기본 장애물인 미군을 남한에서 몰아내고 현정권을 뒤집어 엮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한에 참다운 “인민 정권”이 서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과 남한의 애국적 민주력량이 단합된 힘에 의하여 통일은 순조롭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평화통일 방도 속에는 반드시 남한 공

산혁명이 선행조건으로 되어야 한다는 전략원칙(戰略原則)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볼 때 북한 공산집단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 방도란 바로 전쟁과 폭력혁명에 의한 공산화 통일임이 분명한 것이다.

한편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 또는 대남공작의 본질문제는 곧 “남조선 혁명” 문제이며, 그 구체적 개념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추진문제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공산집단이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수행코자 하는 남한 혁명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서 반제 민족해방 혁명인 동시에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며 이는 또한 노동계급의 주도하에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공산집단의 남한 혁명의 성격 규정은 한국에 강력한 반공정권이 존속해 오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적화야욕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근본적 장애요소로 되고 있는 “미군 주둔(美軍駐屯)”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전략, 전술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즉, 북한 공산집단이 남한 혁명노선의 한 측면을 “반제 민족해방 혁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한국을 식민지로 규정하고 소위 “반제” “해방”이라는 이름하에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나아가 한·미, 한·일 조약을 비롯한 한국의 대미 일 유대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한편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측면에는 한국의 강력한 반공정권과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질서를 비민주, 반봉건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으로는 “민주화 정책”(民主化 政策)을 구현하는 인민정권수립 주장으로, 현 반공정권을 타도하고 용공(容共) 내지 공산정권 출현을 유인하려는 술책임이 명백한 것이다.

그들은 또 현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 사회 질서가 당면하고 있는 취약성과 병리적 현상들을 극도로 과장하여 국민의식속에 사회주의제도와 질서를 지향토록 유도하므로써, 심리전적 효과도 아울러 획득코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산집단은 남한 혁명에서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이 실현되지 않는 혁명은 철저한 혁명으로 될 수 없으며 부분 승리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끝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남한 혁명의 주도세력과 시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북한 공산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남한혁명은 단지 현정권을 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 수립될 새로운 정권이 공산정권이어야만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북괴 통일정책과 평화제약의 실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전략기조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 공산집단이 내세우는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평화세계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여기서 70년대초 북한 공산집단이 한국측

의 통일과 평화정착 노력에 맞서 내놓은 여러가지 “제의”의 내용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공산집단은 73년 4월 5일 최고 인민회의 5기 2차 회의에서 남·북간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 외군철수, 쌍방군대 10만 또는 그 이하로 감축, 무기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 반입중지, 이상 등의 문제 해결과 무력불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남·북 평화 협정체결을 제의하는 이른 바 “남·북 평화 협정 체결안”을 내놓았다.

73년 6월 23일 북한 공산집단은 한국정부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대응하여 이른 바, “조국통일 5대강령”(祖國統一 5大綱領)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긴장상태완화,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실현,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 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에 의한 남·북 연방제 실시, 고려 연방국 국호로 유엔가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해 7월 24일 이른 바 제 59차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확대 회의를 통해 북한 공산집단은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하고 나섰다.

북한 공산집단은 이 제의를 통해, 조속한 기일내에 평양이나 판문점, 혹은 서울 또는 임의의 장소에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들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의 사전준비를 위해 실무자회의를 열어 공동 준비 위원회를 구성, 기타 정당, 사회단체들간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을 병행하고자 요구하였다.

한편 74년 3월 25일 북한 공산집단은 최고 인민회의 5기 3차

회의에서 “대미 평화협정”안을 내놓았다.

이 “대미 평화협정”안은 첫째, 상호 불가침 및 무력충돌 위험성 제거, 둘째, 무력증강 군비경쟁 중지 및 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 반입중지, 셋째, 주한외군의 유엔군 포지제거 및 조속 철수, 넷째, 외군철거후 한반도의 군사 및 작전 기지화(軍事作戰基地化) 금지 등을 주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북한 공산집단은 74년 11월 8일 또다시 “대민족회의”나 또는 “정치 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요 제안 내용은 우선 대내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내정 불간섭과 대립, 불신을 제거하며 경제교류와 합작을 포함하여 기타 각종 교류, 합작 및 연방제 실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무대의 공동진출,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외적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토의하자고 요구하였다.

한편, 군사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 불행사문제, 정전 협정 중요조항 이행문제, 현군사 정전위원회를 대체할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 구성,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등 평화유지 공고화 문제를 토의할 것을 내세웠다.

이밖에 북한 공산집단은 대내외 정세 동향과 관련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 문제 해결방안을 저들 나름대로 제시해 오곤 하였다.

물론 남·북 조절위원회의 각종 회의나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도 북한 공산집단은 집요하게 저들의 제안을 들고 나왔다.

북한 공산집단의 이러한 통일내지는 평화유지를 위한 각종 제의는 일견,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을 단축시키는 보다 전진적인 제안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내세우는 연방제나, 대민족회의나, 대미평화협정 제의나 하는 것은 그 전술적 저의와 허구성이 분명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적 분석, 평가보다도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즉, 북한 공산집단의 통일정책이나 평화제의를 어디까지나 그들의 대남혁명을 위한 기본전략에 입각한 매시기별 전술적 운용을 위한 변형이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북한 공산집단의 통일정책의 실체는 대남무력적화 통일노산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통일 의식 현황 (統一意識現況) 과

대내외 상황 인식 (對內外狀況認識)

가. 통일 의식 현황과 의미

평화통일을 위한 공존시대의 대북한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통일 의식은 어떠한가, 또한 통일 의식 형성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아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 전반의 통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최근 작성된 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근년간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식에 대한 자료를 상호 검토 비교해 봄으로써 국민들의 통일 의식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 집단의 통일 의식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겠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연령계층상 뚜렷한 특성중의 하나는 전쟁 미경험 세대 (戰爭未經驗世代)의 사회적 진출이라는 점이다.

이 전쟁 미경험 세대는 20세 중반에서부터 30세 전후가 되는 연령층으로, 아직 대부분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군대에 복무중인자가 많으나, 이 중의 상당부분은 여러가지 유형 (類型)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80년대~90년대 우리 사회발전의 핵심그룹이 될 것이고 2000년대에 가서는 사회의 중견층(中堅層)으로서, 모든 분야의 지도층에서 국가를 이끌어 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문제는 어차피 이들의 의견이나 태도를 무시할 수 없겠으며, 어쩌면 분단조국의 통일문제 해결은 이들의 손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제할 때, 이들 계층에 대한 통일의식 파악은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이념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임이 분명하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의 약 89.4%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중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라는 질문에 전자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면 후자 즉 공산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보고 있는 학생은 3.5%, 기타 약 7%는 어느 체제가 우월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의사가 미확정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이론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 모두를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바로 우리의 정치사회적 특성(政治社會的特性)에 기인(基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위협과 실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특이한 정치사회적 상황 아래서, 우리의 대학생들은, 순수한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공산주의 체제도 민주주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정치체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인식상황 때문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에 대

립되는 개념인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적은 수(3.5%)이긴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도 이론적인 면에서의 이상형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만족할만한 체제가 못 된다는 현실성을 이들이 비교적 노골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년층과 학생들이 진보적인 성향(性向), 기존에의 반항태도, 급진주의적(急進主義的) 사고등의 속성(屬性)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임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부류가 3.5%에 이룬다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여 있고, 또 학생이 정치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류의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성향파악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의 안보, 통일의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대학생은 거의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반수 이상(54.4%)이, 민족적 긍지(民族的 矜持)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의 정치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하겠다는 학생의 거의 80%에 이르고 있다.

대학생의 약 32.5%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소로서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을 들고 있으며, 약 22%가

국력배양(國力培養)을 반공자세 확립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 중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69%)는 북한 동포들에게 한국이 북한 공산집단보다 우월함을 설명할 때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과반수는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침공시에 최전선에 나서고 비록 점령된다 할지라도 반공지하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 현상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가 우월하며(3.5%) 북한 동포에게 한국의 우위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자신이 없고(1.4%), 한국이 북한 공산집단보다 우월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1.8%),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다.

또한 북한 공산집단이 무력으로 침략할 경우 이들과 협상(協商)해서 생활하겠다는가(2.5%), 적의 점령시에 북한 공산정권과 협조해서 살겠다(3.3%)는 의견이 적게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비록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유출된 의식태도라 하더라도 심각히 고려해 볼 문제라 하겠다.

여기서 대학생들의 대북한 인식태도, 통일에 대한 견해 그리고 남·북 대화에 대한 평가를 시사해 주는 조사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대북한 인식 태도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수(61%)가 북한을 우리의 제 1의 적대적 정치집단(敵對的 政治集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과반수 정도(52%)가 북한 공산집단이 공산주의 전략이나 사상

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인 이들에게 이와 같이 적대 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도 우리의 동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남·북 대결에서 어느쪽이 승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54%)이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41%)가 북한이 승리할 것이라는 수(5%)보다 압도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52%) 북한을 공산주의 전략이나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을 대상으로 보는 반면, 나머지(48%)는 그래도 북한이 다소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북한 사회가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한 폐쇄사회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거의 73%이나 되는 반면, 경제적 여유와 인민의 복지도 다소 보장되어 있으며(18%), 상당한 경제력과 생활향상이 되고 있고(3%), 상위권의 발전된 사회(1%)인 동시에 자주성을 띤 강대국(1%)이라고, 북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도 높ی 23%이다.

남·북한 군사력과 관련하여, 남·북 무력 대결시 어느쪽이 우세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북한 공산집단이 우세할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이(48%) 열세일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14%)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이르고 있고 또 쌍방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39%)보다도 많다.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침략 정책과 관련하여,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수 (58%)가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침공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하는 학생 (26%)과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 (16%)보다도 많다.

북한 공산집단의 호전성을 연화(軟化)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북한 사회가 개방체제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수 (63%)는 북한 사회가 폐쇄적일수록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수 (34%)의 거의 두배에 이른다.

북한 사회가 개방체제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미국 등 서방 자유국가가 북한과 문호개방을 시도하는데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권장(勸奨)해야 된다는 입장 (32%)보다는 이를 막아야 된다는 입장 (47%)에 서고 있어, 서구 제국의 대북한 접근정책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통일에 대한 태도

한국 대학생들은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후의 한반도 장래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71%), 비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 (21%)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통일의 최대 저해요인(沮害要因)으로 남·북간 사상체제 대립을 들고 있으며 (41%), 다음이 미, 일, 중, 소 등 관계 열강(列強)의 이해관계 (23%) 남·북간 불신 (19%), 북한 공산집단 지도층의 무성의 (4%)를 들고 있다.

또한 통일 실현방안으로, 남·북 당사자간의 타협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수는(56%), 한국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26%)이나 미, 일, 중, 소의 중재(仲裁)로 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10%), 유엔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학생(6%), 그리고 북한측 주장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한편 북한 공산집단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통일 접근법에 대해, 북한측이 폭력혁명 즉, 전쟁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과반수를 넘고(52%) 있으며, 지속적인 긴장상태만 조성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히 많은 수(24%)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평화적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극소수(3%)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오늘날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구조는 10여년전(1966년)에 단편적으로 조사된 통일의식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60년대 대학생들은 남·북 재통일 방법으로 남·북 직접 협상에 의한 통일(21%)보다는 유엔 감시하의 총선에 의한 통일을 더 많이(25%) 지지하였으며, 재통일 예상시기에 관하여는 거의 과반수(49%)정도가 가까운 장래에는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frac{1}{3}$ 이 넘는 수(37%)가 가까운 장래에 통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므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재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60년대 말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오늘날과 같이 바뀐 것은 오로지 남·북 대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나. 대내외 상황인식 (狀況認識) 의 필요성

1) 대내적 문제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가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로 남·북 분단 4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 대화를 무조건 환영하였다.

그러나 냉정을 되찾는 일부 인사들은 과연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와 정치제도 아래에서 북한 공산집단과 회의를 하고 평양을 왕래한 사실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관심을 표명하였다.

물론, 이 문제는 비상적 상황하에서의 국가원수 (國家元首) 의 초법적 (超法的) 인 국가 통치권 (統治權) 발동 사항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 (國是) 로 하고, 반공법과 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치제도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현행법률 적용의 모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무인할 수는 없겠다.

7.4 남·북 공동성명에 앞선 남·북간 왕래는 불가피하게 한국의 현행법 제도의 한계를 노정 (露呈) 시켰으며, 적극적으로 볼 때 현행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시켰다.

물론 당시 당국으로서도 법적, 제도적 면에서 바꾸고 보강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여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우기 민청학련사건과 같이 자생적 공산주의의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이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현실적 문제라 하겠다.

또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아울러 불가피하게 대두될 노동계층의

확장 현상에 대해서도 고차적인 정책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현재 100억불의 수출을 하기 위해 국내 각급 산업체는 600백만의 노동자를 포용하고 있는데, 80년대초 500억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천200만의 노동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층의 새로운 집단적 세력이 정치적 성향을 띄우게 될 경우, 이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기대되나, 정치적인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발전된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면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6.23선언에 입각하여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경쟁, 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오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까지 적성공산국이라든가 비적성공산국이라는 정확한 개념의 설정이 확고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은 동구 공산권을 비롯하여 소련과도 문화, 경제, 스포츠면에서 접촉을 이루어 왔고, 중공과도 접촉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법률적 체제는 이와 같은 정치상황의 전개를 뒷받침하여 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상황 이외에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곧 전후세대의 등장이라는 문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전후세대의 사회진출이라는 문제

는 크게 두가지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전쟁 미경험세대의 보편적 속성인 무사안일, 기회주의, 평화 지향주의의 팽배라 하겠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 사회적 안정속에 비교적 불안과 빈곤을 모르고 자란 전후세대들은 현실 체제에 안주(安住)하여 편안한 생활을 즐기려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북간에 이질화(異質化)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6.25전쟁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비극도, 혈연과 생활터전의 분산이란 아픔도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재결합이나 죽기전에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소망도 이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동질성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며, 남·북간 통일정책도 궤도수정(軌道修正)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국제적 상황의 교훈

국토와 민족분단의 비극은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곳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 우리 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질러야 하겠다.

현실적으로 유형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구상의 몇몇 분단국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독일이라 하겠다.

물론 독일과 우리는 지정학적 측면에서나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한

제 때문에, 그 성공과 시행착오의 경험을 그대로 전이(轉移) 대입(代人)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서독 관계의 양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서독이 갖가지 어려운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평화를 정착,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데는 두가지 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배경은 무엇보다도 동독이 평화정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쏘련의 위성국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공산통일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동독은 현상유지정책을 밀고 있으며 동족상잔의 참혹을 피한다는 평화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간에 평화정착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동·서독은 분단초기에 상호교류의 틈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서독은 1947년 점령군이 체결한 동·서독 경제거래 민덴협정이 동·서독 단일성을 유지시켜 줄 유일한 통로임을 알아차리고 국가적인 열과성을 다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동독권력자를 지원한다는 정치적 반발과, 교류초기 이후 줄곧 지속된 경제적 불이익 속에서도, 양측간의 경제거래 지속이 동·서독 평화유지에 절대적 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서독측은 꾸준히 이를 지속시켜 왔다.

양극으로 대립된 정치이념에도 불구하고 통일집념에 불타고 있는 서독은 정치적 차원을 떠난 방안을 내세워 동·서독간의 공존, 공영을 모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양독(兩獨) 간에는 비정치적인 상호가족방문 사업이 실현되어 양독간은 1977년 한해에만도 무려 4백60만 이상이 왕래하였으며, 분단국 상호 이익을 목표로 한 경제거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서독 양국간의 경제 거래량이 지난 1976년 한해에 5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78년 11월 동·서 양측 정부는 서백림-함부르크간을 잇는 2백16킬로미터의 고속도로 신설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1960년말 서독이 서백림에 순환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통일후의 동백림 통행을 고려하여 완공하자 사전협의 한번 없던 동독이 동백림내에 이어 연결도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묵시적(默示的)인 건설협조가 있는 이후, 양독간에 “통일된 독립”을 위한 길을 공사함에 있어 공식적인 협조의 실례를 남겨 놓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독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명백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아니라, 양독간 정부가 상반된 정치적 대결로 인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동·서독간 경제거래의 파멸 위기를 단 한번도 겪지 않고 넘겼다는 사실과 함께, 양독 정부의 평화 정착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주국 소련의 지배하에 세계 적화 혁명의 촉수 노릇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동독과 북한이 분단조국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쪽은 평화수단(동독)을, 다른 한쪽은 무력침략수단(북한)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와, 또한 북한 공산집단의 현상파괴 정책을 평화정착 노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동·서독 관계의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하겠다.

4. 전진적 통일관 (=대북한관) 정립을 위한 시도

가. 새로운 통일관 (=대북한관)의 전제

이 시점에서, 남·북이 적어도 전쟁의 위험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방면적 교류를 통한 평화공존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를 가정하여, 새로운 통일관 (=대북한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통일정책이 북한 공산집단의 통일정책보다는, 보다 더 통일지향적(統一指向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일지향논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설명이 가능할 것이나, 여기서는 우선 우리의 공존을 위한 평화정착 노력이 결국은 이상의 대전제와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당면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평화정착정책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이 현재 희망하는 “평화정착”은 결코 분단 고정화를 위한 소극적 평화지향 정책이 아니라, 통일의 실행 과정으로서의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현상고정화 지향정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존, 내지는 분단된 상태로서의 평화정착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내세울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의 통일정책에 “평화는 먼저고 통일은 다음이다”라는 시계열(時系列)개념을 부각시킬 필요도 없겠다.

이는 자칫 통일을 뒤로 미루겠다는 소박하고 단순한 인상을 주기 쉽고, 또 실제 북한 공산집단은 바로 이 점을 대남, 대외 심리전에 활발히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적인 완전통일”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까지 현상 고성화를 의미하는 평화정착 노력은 어디까지나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단계적 작업의 실행이라는 면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된 어느 시기를 설정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남·북이 분단된 상태를 전제로 한 통일관(=대북한관)의 성립은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보겠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공존체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의 세계 적화 기본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없는 한, 북한이란 실체는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위협적인 경쟁상대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한국의 총화적인 국력이 그 어느때 이 틈간에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일관(=대북한관)의 정립은 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평화통일이 달성되기 전까지 불가피한 체제적 경직성에 대한 국민적 양해와 지지를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의 구체적인 위협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일방, 민족적 부(富)를 위한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총화와 국력의 집약이 밀반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발전에 힘을 기울여,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풍요로움이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데 필요한 “부(富)의 축적(蓄積)”

으로 승화되게끔 적절한 명분을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이러한 전제와 아울러, 현실로부터의 단편적인 미래의 통일성을 세우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완전한 미래의 통일상 안에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보다 전진적인 통일관(=대북한관)을 정립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나. 새로운 통일관(=대북한관)정립을 위한 몇가지 방안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시간은 어차피 지금까지의 6.25 경험착중심의 북한관을 퇴색시키고, 새로운 북한관 형성을 강요하고 있다.

전쟁 미경험 세대에게 있어서 북한이 마치 외국으로 보이는 경향이 점점 강해질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진전은 “통일”의 근본장애를 조성해 놓을 것으로 염려되는 것으로, 이는 정치 사상 교육(政治思想教育)이나 법적차원(法的次元)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미경험 세대에게도 지난 70년대 초기의 남·북 대화는 몇가지 교훈을 남겨 주었다고 본다.

즉, 7.4 공동성명 이후 실시된 남·북 왕래 결과는, 이들 세대들의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증가시키기도 했으나 반면, 근년간 국제적인 경제위기 발생과 국제 경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민족생존”을 위한 “북의 자원(北의 資源)”과 “남의 기술(南의 技術)”의 융합욕망을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인식시켜, 통일 성취를 위한 의지를 크게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기초 위에서 새로운 통일관 (=대북한관) 정립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편의상 제도적(制度的)인 측면과 실천적(實踐的)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제도적 측면

북한 공산집단을 “괴뢰”로부터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한 사실이 정치적, 법적으로 모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이를 민족감정의 차원에서 수용되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우리만이라도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두개국가, 하나의 민족”임을 역사, 문화, 언어 교육 속에서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다.

여기에는 북한 공산집단의 집권층과 북한 동포들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권층에 대해서는 증오, 경계, 격멸(擊滅)의 신념, 일반 동포들에 대해서는 구출, 사랑, 포용의 신념을 갖게 해주는 교육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적대의식을 북한전역에서 집권층으로 축소시키는 정치 교육 작업의 전개가 요청된다.

평화통일 노력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공존 상황에 대비한 각종 구체적 안건의 연구와 발표 그리고 이의 적절한 홍보적 활용을 위한 조직체계가 활발히 운영되어야 하겠다.

한편 6.23 민족전쟁의 비극을 상기시키는 재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평화적 새통일의 역사적 당위성과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적화 통일노력의 부당성을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나아가서 공산주의 비판교육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공산주의 혁명의 신화(神話)의 허구성을 구명(究明)해 주도록 해야겠다.

대북전략적 차원(對北戰略的次元)에서 볼 때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성 있는 자세의 견지가 요청된다.

예를 들어 북한 공산집단이 한국의 반공법 등을 핑계로 대화를 기피하는 경우, 한국은 북한 공산집단이 대남무력 적화통일 노선(對南武力赤化統一路線)을 골간(骨幹)으로 명시한 노동당 규약(勞動黨規約)을 폐기하고 소위 저들의 헌법(제5조)를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상호 체제 개선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한다면, 대북 심리전적 측면에서나 남·북 대화에 있어 공세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통일관(=대북한관) 정립을 위한 제도적 방편은 남·북간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뚜렷한 통일의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실현적인 측면

통일 지향을 위한 새로운 통일관(=대북한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민족사회를 건설하여 “통일조국의 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대다수의 북한 동포가 우리 민족사회 성원의 일부분임을 인식시키는 작업으로 집중되어야 하겠다.

“통일조국의 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있어서의 정책 차원과 국민 감정의 일치성을 기해야 하겠다.

이미 경제적 발전으로 번영을 위한 노력과 능력에는 자신이 있는만큼, 고도 산업사회 실현에 불가피한 정치 사회 문제 - 복지 후생문제, 노동 계층 문제 등 - 의 대두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년내 도래할 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
의 예방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정치체제의 조화적
발전과 공산주의의 이념적 침투(理念的浸透)를 막기 위해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Trade Unionism 등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한 이념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체제를
개선, 국민학교에서는 김일성 집단과 북한 동포들을 구분할 줄 아는 단
순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는 북한 공산정권과 한국에 있어서 “자유”와
“기본권(基本權)”의 개념 차이 등을,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공산주의의
이념적 허구성과 공산혁명의 신화의 현실적 괴멸(壞滅)을 논증(論證)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경우, 공산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공
산주의에 대한 “선별된 원전(選別된 原典)”의 구독을 허용하고 정확
한 해석과 비판교육을 실시하여, 호기심에 의한 오해와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해 주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 교육은 대학뿐만아니라 교육자중에서 선발된 특별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교육적 파급효과(波及效果)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 미경험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자기 자신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깨우쳐
주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신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조국상”을 정립시켜 통일에의 의지와 함께 통일 시대의 기대를 촉발(觸發)시키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성전(聖戰)에 기꺼이 참가하여야 한다는 사명의식(使命意識)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이 오로지 우리의 힘이 북한보다 훨씬 강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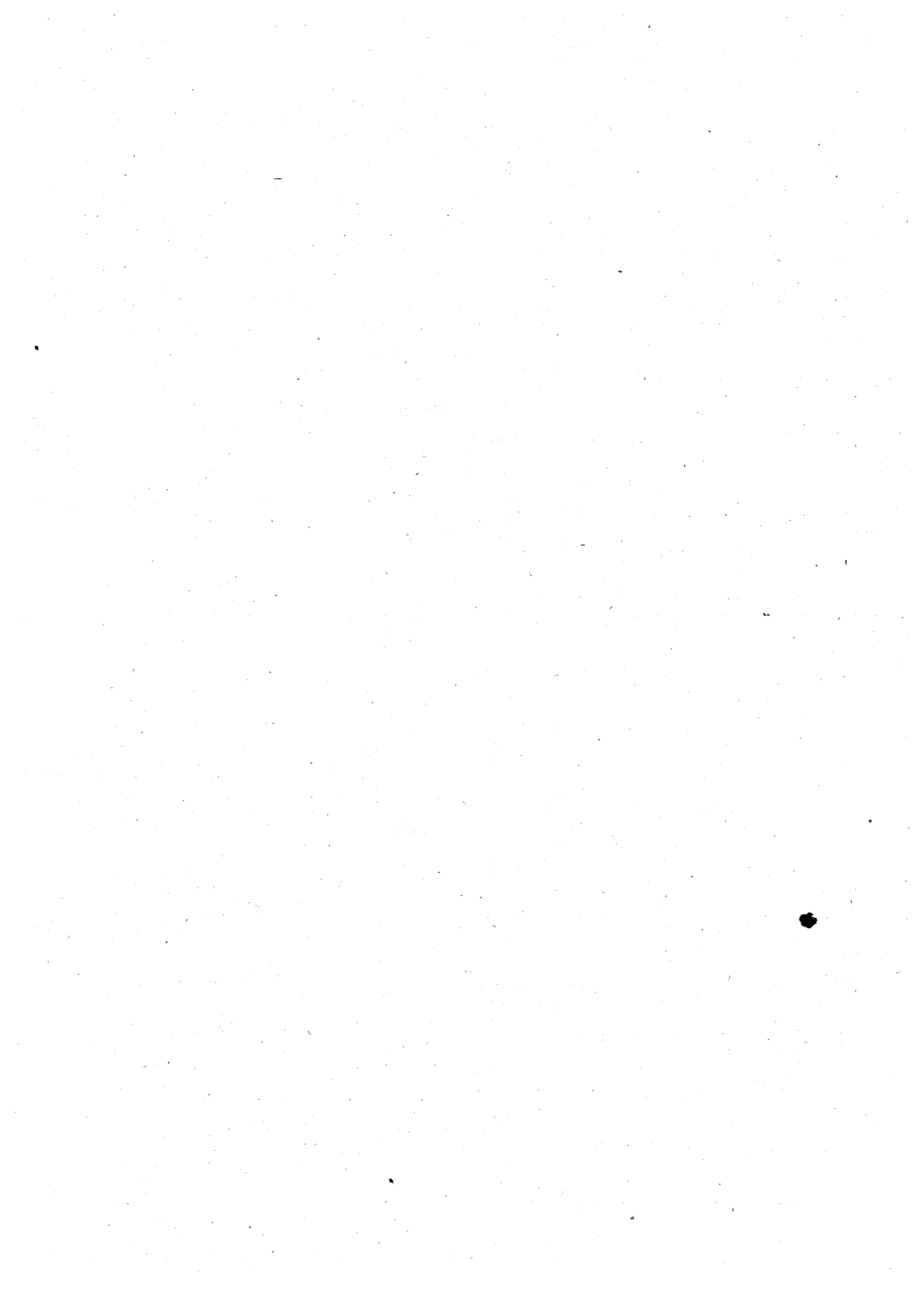
(Summary)

A VIEW OF COMMUNISM AND NORTH KOREA
IN THE ERA OF COEXISTENCE

--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A Progressive View
of Unification,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

by Kang In duk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 VIEW OF COMMUNISM AND NORTH KOREA
IN THE ERA OF COEXISTENCE

-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A Progressive View of Unification,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

Peaceful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is, judging from the viewpoint of removing the danger of fratricide and promoting reunion of the groups in blood relations, is all too natural and a matter of course, since the division of the fatherland into the southern and northern halves produced confrontation in consciousness with an extremely hostile feeling between the people of a single nation i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resulted in the split of a national common experience as well as divided the territory on which our nation have lived together and brought about the dispersion of the nation.

Furthermore,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phenomenon that all countries are bent on securing of their national interests as the economic

competition on international scene recently grew keen and viewing from a positive stand to respect the survival and economic prosperity of "a nation" on earth, self-evident is the natural character of "unification."

Actually, because our move for achieving unification is a political act to be developed with the concrete partner of north Korea as an object, needed is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called "north Korea," to effectively establish and implement the unification policy.

Moreover, we should evidently grasp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and, in addition, the basic goal of its anti-south strategy.

Without correct understanding of, or judgement on, the substance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and its unification or its anti-south strategy,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our view of unification

(or that of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so far has made steady efforts for achieving unification to provide a base for happy life of the whole nation.

Such an effort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is presented concretely in a form of the policy for "settlement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which is an expression of the will to give a solution to the question concer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n a basis of promoted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residents in both sides.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n expression of its efforts to solve the question concerning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However, we should be attentive to the limitations of the policy in terms of the anti-north strategy.

The limitations lie in, among others, the fact that the efforts for settlement of peace in the peninsula mad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ives an impression that it is a "policy for division" heading for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to continue the state of division.

Therefore, requested is the work to clearly explain that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ever designed to fix the division as well as that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eventually aims at bringing the whole peninsula under Communist rule.

To meet this demand, we should strengthen the system for professional studies on unification policy as well as communism.

The reality that the Republic of Korea, on a basis of its strengthened national power, now possesses the ability to achieve hegemony in competition with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in solving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exposes our need for establishing a more progressive unification policy.

Establishment of a new unification policy requires proper measures to prepare for situational changes in and outside the country.

We should keep an eye on the social advance of the young generation that did not experience the Korean War,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changing situation within and without the country.

Based on the prospect that the question of unification will be dealt with by these young people in the future, we should exactly grasp their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inclination and attitude and should provide proper measures to cope with the situational changes.

In connection with these various situational changes, we should establish our view of unification

(or that of north Korea) under the following major premises:

First, our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more unification-directed than that of the north Korea Communist regime; a unification policy established under a prerequisite for the state of division is undesirable since it can hamper with the unity of people's will to achieve unification and is exploited by the north Korean Communists for their psychological war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surpass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in total national power, to achieve the peaceful unification.

Included herein also is the establishment of firm ideology for unification, to win in the competition with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in the superiority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The logic of power" is, at current stage, a

deterrent to the threat of communism and eventually will be the motive power for propelling and bringing about a revision to, and a transmutation of, communism.

Third, we should secure continued people's understanding of, and support to, the rigidity of our political system, which is inevitably for countering the realistic threat posed by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and for maintaining the accelerative economic progress.

We should soothe the national feeling with abundant living conditions and further provide the people with a sense of duty that they should turn their piled wealth into the power for freeing their brethren in north Korea from the Communist regime.

In conclusion, a new view of unification (or that of nor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an image of the unified fatherland, which is suited for our "national will to realize unification" and meet our "national expectations for the era of unified fatherland."

